

주요 업무보고

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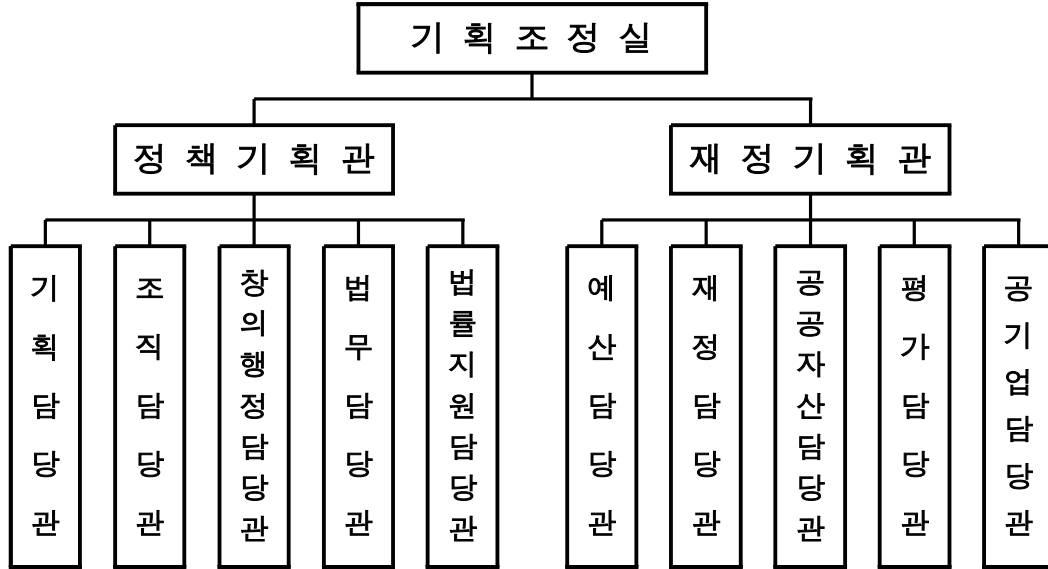
기획조정실

목 차

I . 일 반 현 황	1
II .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5
1. 창의적 · 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7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23
3. 건전한 재정 · 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31
III . 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9
IV . 법령 · 제도 건의사항	77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9팀, 1직속기관 · 2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1단 3실 4센터), 서울기술연구원(1본부 7실)

인 력 292명/276명(정원/현원)

(’23. 9. 27.)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92 / 276 (163)	253 / 243	33 / 27	- / -	6 / 6
기 획 담 당 관	41 / 40 (18)	34 / 35	5 / 4	- / -	2 / 1
조 직 담 당 관	33 / 31 (19)	32 / 30	- / -	- / -	1 / 1
창 의 행 정 담 당 관	22 / 22 (13)	21 / 20	1 / 1	- / -	- / 1
법 무 담 당 관	26 / 25 (15)	23 / 22	2 / 2	- / -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32 / 29 (19)	14 / 13	18 / 15	- / -	- / 1
예 산 담 당 관	40 / 40 (29)	38 / 38	1 / 1	- / -	1 / 1
재 정 담 당 관	32 / 30 (17)	31 / 29	1 / 1	- / -	- / -
공 공 자 산 담 당 관	12 / 11 (4)	9 / 8	3 / 3	- / -	- / -
평 가 담 당 관	33 / 30 (17)	32 / 30	- / -	- / -	1 / -
공 기 업 담 당 관	21 / 18 (12)	19 / 18	2 / -	- / -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시립대 운영 지도·지원 등
창의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행정 기획 및 과제발굴, 확산일상화 추진 ○ 시정연구, 직무발명, 학술용역 ○ 인구변화대응 및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 정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시민참여예산 총괄 등
공공자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공공자산 관리체계 개선, 공공자산 활용 기획·검토 ○ 공공기여 통합관리 및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 ○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산 총 규모 : 6조 758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9.27.)

구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예산현액)	증감
합계	6,101,208	6,075,800	-25,408
일반회계	2,318,582	1,762,937	-555,645
특별회계	292,922	46,017	-246,905
기금	3,489,704	4,266,846	777,142

○ 일반회계 : 총 1조 7,629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9.27.)

구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예산현액)	증감
합계	2,318,582	1,762,937	-555,645
기획담당관	1,404	2,167	763
조직담당관	1,156	65,489	64,333
창의행정담당관	131,186	45,416	-85,770
법무담당관	697	639	-58
법률지원담당관	7,766	7,377	-389
예산담당관	258,316	231,835	-26,481
재정담당관	1,915,131	1,405,638	-509,493
공공자산담당관	-	1,297	1,297
평가담당관	2,131	2,142	11
공기업담당관	795	937	142

○ 특별회계 : 총 460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9.27.)

구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예산현액)	증감
합계	292,922	46,017	-246,905
예산담당관	292,672	45,878	-246,794
공공자산담당관	250	139	-111

○ 기금 : 총 4조 2,668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3.9.27.)

구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예산현액)	증감
합계	3,489,704	4,266,846	777,142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1,268,874	1,391,634	122,76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2,220,830	2,875,087	654,257
고향사랑기금	0	125	125

II .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 창의적·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7
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활성화	9
②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14
③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개선	17
④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1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23
①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25
②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27
③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28
④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운영의 법률적합성 확보	30
3. 건전한 재정·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31
①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33
② 공공기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공공가치 제고	34
③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36
④ 홍보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38

1. 창의적·효율적 시정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활성화

②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③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개선

④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1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활성화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창의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기간·대상 : 연중 수시 / 市 소속 공무원
- 사업 내용 : 우수 창의제안 발굴·선정 및 직원 창의활동 지원
- '23년 예산 : 282백만원
 - 우수 창의제안·실행 공무원 포상금 160백만원, 학습조직 운영 122백만원

□ 추진내용

- 제안된 총 1,053건의 제안 중 40건의 우수사례 발굴(1~3차 창의제안)
 - ※ 4차 우수 창의제안 : 325건의 제안중 15건 내외 선정(10월 말)
- 업무 관련 토론·연구 등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확산으로 창의적 업무개선 유도
 - 학습조직 : ('22년) 40개, 772명 참여 ⇒ ('23년 10월) 105개, 1,460명 참여
-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용 업무매뉴얼 제작·배포('23.2.~)
 - 한눈에 보는 업무 지침 게시(2월), 우수 행사 사례집(3월), 용역 실무 도움서(7월)
- 정책활용도 제고 위한 '창의제안 보완·발전 지원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23.9.)
 - 제안사항 분야별, 주제별, 수준별 DB화 및 관리, 미채택 제안 보완·실행 유도 등

□ 향후계획

- 5차 창의제안(창의제안 재도전, 자율제안) 공모·선정 : '23. 10.~11.
- '창의행정 실행상' 선정 추진 : '23. 10.~12.
 - 실행 우수사례 공모 및 실적검증('23. 10.~11.),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23. 12.)
- 창의 학습조직 우수사례 공모전 계획 수립 및 개최 : '23. 11.~12.

※ 시행일은 업무협약, 예산확보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 계	실행완료	추진중	실행지연
40	12	25	3

< 1차 : 1 ~ 14번 >

1.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 구축 ('23.7.~), 실행완료**
 ① 하차 후 동일역 기준시간 내 (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
 ② 열차 내 안내표시기의 도착역 정보 노출면적·시간·빈도 등 확대, 스크린도어 뒷면 역명 스티커 부착

2.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도로 개선 ('23.12.~) 추진중**
 상습정체 발생지역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 선정, 단계적으로 개선

3. **어르신과 동행 '세금 고지서' 디자인혁신 추진 ('23.6.) 실행완료**
 전체 납세자 대상 큰 글씨 세금 고지서 제작·발송

4. **경찰청 유실물 포털 연계로, 공원유실물 쉽게 찾아요 ('23.5.) 실행완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서비스 (LOST112)를 활용하여 공원 유실물 관리 체계화

5. **매년 반복되는 뽁뽁이 설치 노역은 그만! ('23.9~'23.12.) 추진중**
 매년 반복되는 창문 뽁뽁이 설치 및 철거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과 대량의 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해 반영구적 덧유리 설치 지원

6. **복잡한 환불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권익 개선 ('23.5.) 실행완료**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 통일 및 간소화 협의하여 카드사에서 승인번호(카드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7. **혼잡 중앙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개선 ('23.12.~) 추진중**
 중앙정류소 뒤쪽에 횡단보도(전폭 또는 반폭) 추가 설치하여 혼잡도 완화

8. **전화 레터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 해소 ('23.4.) 실행완료**
 전화 레터링 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편 해소

9. **이용률 저조 市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하향 조정 ('23.6.) 실행완료**
 주차면수 대비 이용률 낮은 주차장 선정하여 인근 민영주차장과 유사 또는 소폭 저렴한 수준으로 월정기권 요금 하향 조정

10. **서울형 입원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개선 ('24.6.)** **추진중**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판정으로 선정 방법과 절차 간소화

11. **패키지(package)형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23.12.)** **추진중**
각종 집수리 사업의 홍보(안내)를 통합하여 단일홈페이지에서 진행, 지원받은 주택은 건축주택 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 이력 관리

12.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23.11.~)** **추진중**
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차순위 기업군에 바우처 제공, 바우처는 민간 공간 임차 및 비즈니스 지원 민간 전문 서비스 이용 용도로 사용

13. **주거상향사업 입주자 계약절차 간소화 ('23.3.~)** **실행지연**
임대차 계약 체결을 SH공사 포함, 자치구별 1개소씩 운영 중인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로 확대

14. **남산공원 전용 셔틀버스 신설·운영 ('23.4.)** **실행완료**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주말에 단거리 순환노선 신설·운영

< 2차 : 15 ~ 26번 >

15.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자양취수장 무인운영 추진 ('23.7.~)** **추진중**
장래 수요감소를 고려하여 신설 1개소는 보류하고, 노후시설 안전성 재평가로 4개 노후 정수장 최대 10년 연장 운영 및 순차적 현대화 추진, 4,897억원 예산절감

16. **손목닥터 9988 × 서울둘레길 ('23.12.)** **추진중**
손목닥터 9988 앱과 서울둘레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둘레길 코스별 완주에 따른 포인트를 추가 지급

17. **전통시장-민간기업 상생 프로젝트 ('23.12.~)** **추진중**
전통시장 빈공간 활용하여 민간기업 브랜드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18. **「종이 없는 계약행정」 추진 ('23.6.)** **실행완료**
현행 전자적 처리분야 이외 관행적인 도장 날인 및 종이 출력을 생략, 모든 계약 업무처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수행

19. **반지하주택 모바일 전수조사 및 시스템 관리 ('23.10.~)** **추진중**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모바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연계하여 조사결과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지속 관리

20. **유휴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 개발 ('23.12.~)** **추진중**
공유재산 중 유휴 공공시설 현황을 공유플랫폼 개발을 통해 시민과 공유하여 사용 희망자에게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21.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고성능 제설장비 도입 (23.9.~) 추진중**
 기존 제설장비보다 제설효과가 높고, 도로 훼손 위험이 없는 고강도 고무삽날로 교체하여 민간장비 임차료 등 예산 절감
22. **어르신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3.12.~) 실행지연**
 서울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 예방교육 이수 시 보장보험료 상향 인센티브 제공
23. **책읽는 서울광장 「아주 특별한 밤의 여행도서관」 (23.7.~8.) 실행완료**
 7-8월 휴서기 야간시간(4시~9시)에 이색적인 「책읽는 서울광장」 특별기획으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운영
24. **그린폴(green pole) 골목길 프로젝트 (24.3.~) 추진중**
 녹지가 부족한 생활권 가로(상업·주거) 및 골목에 그린폴(등반식물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대) 제작·설치
25. **식물해설 QR코드 원터치로 손쉽게 공원을 즐겨요! (23.5.) 실행완료**
 식물 표찰에 식물소개 QR코드를 추가하여 전문가 해설(국어, 영어) 운영으로 어린이 교육 및 외국인관광객 안내 기능 강화
26. **서울페이 상품권 잔액기부로 서울사랑플러스 (23.12.~) 추진중**
 서울페이앱에 사용하지 않는 소액 상품권 잔액 발생 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기부금영수증 자동발행 및 온라인 기부사이트 연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 < 3차 : 27 ~ 40번 >
27.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운영 추진 (23.7.~) 실행완료**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이용자가 따릉이가 과다 거치된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과소 거치된 대여소에 반납 시 마일리지 지급(티머니GO 앱)
28. **여행은 가볍게·이동은 편리하게, 관광객 서비스 제고 (23.10.~) 추진중**
 ① 역무실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도입, 양방향 디스플레이 13개 언어 구현
 ② T-Luggage 서비스로 공항에서 호텔까지 양방향 캐리어 배송 서비스 제공
 ③ 1일·3일 단기체류, 지하철 무제한 자유이용권 출시(23.10월)
29. **한강에서 낙조를 즐기자! (25.12.~) 추진중**
 한강 교량에서 낙조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시설과 넓고 편안한 보행로를 성산, 마포, 서강대교에 설치하여 관광명소 조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
30. **한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23.9.~) 추진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원스톱 개인정보동의서」양식을 개발, 복지시스템(행복이음) 등재를 통한 상시활용 가능 체계 구축하여 민간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가능

31. **외국인 김치 담그기 체험(&가락시장 경매투어) ('23.10.)** **추진중**
 서울시 방문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가락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김치를 담그는 체험 및 농산물 경매 투어 프로그램 제공
32. **공공미술로 하늘보기 프로젝트 ('24.9.~)** **추진중**
 시민의 유동이 많고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 대표명소를 선정하여 하늘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품 설치
33.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 도입 ('23.12.~)** **추진중**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모바일 매체(카카오톡)로 고지하고 ETAX와 연계하여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 시행
34. **정비사업 지하연결 통로 설치 활성화 방안 ('23.10.~)** **추진중**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촉진 및 지하철(지하상가)과 연계한 시민이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지하공간 조성
35. **문화로 밤을 밝히다 '서울 문화의 밤' 운영 ('24.1.~)** **추진중**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서울 문화의 밤'으로 지정하여 야간시간에 정기적인 축제 및 행사 개최, 주변 문화시설 동시 개방
36. **시민을 위한 다양한 버스 정보 안내 ('23.11.~)** **추진중**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광역버스 잔여 좌석수 표출, 마을버스 BIT에 마을버스 혼잡도 안내 서비스 단계적 시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한 광역/시내버스 혼잡도 예보 서비스 제공
37. **공원 내 보행보조차(실버카) 비치·대여 ('23.6.~)** **실행완료**
 공원 방문자센터 내 보행약자용 보행보조차(실버카) 비치·대여, 서울숲 시범운영 후 '24년 市 직영공원으로 확대 추진
38. **부루마블 in SEOUL -게임하듯 관광하기- ('24.3.~)** **추진중**
 스토리텔링 기반 모바일 게임과 연계한 '서울 여행 도장깨기 프로젝트' 추진 ① 서울 관광지 100선 선정 ② 위치기반 방문지 추천, 해당 지역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반 미션 부여 ③ 미션완료 시 보상 지급 및 완료 횟수에 따른 등급부여
39. **지방보조사업 실적 검증 강화방안 ('24.~)** **실행지연**
 (기획조정실) 공모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적격 심사를 통하여 보조사업 실적 검증을 위한 회계법인 후보군(pool) 구성·관리, 감사인 대상 보조금 관련 지침 교육 등 제공
 (보조사업 부서) 회계법인 후보군 내에서 감사인 선택 및 실적 검증 관리
40. **전기차 무인 로봇충전시스템 실증 사업 추진 ('23.10.~)** **추진중**
 국내 신기술(무인 로봇충전)을 활용하여 레일을 따라 로봇이 이동하여 다수(1:N)의 자동차를 자동 충전하는 방식 도입, 신방화역 환승주차장에 설치후 1년간 실증 추진

2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사무의 적정성·효율성 검토 강화, 기관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민간위탁 사무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제고

〈 주요 지적·건의 사항('22.11.14. '22년 행정사무감사) 〉

◆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개선 필요

□ 추진방향

-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검토로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 체계적 성과관리 및 종합성과평가 추진으로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
- 통합회계감사를 통해 회계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방지

□ 추진내용

- 사무의 적정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
 -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인력·공간 운영계획 심의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총 101건(적정 53건, 적정권고) 35건, 조건부 적정 7건, 심의보류 6건)
 - 유사기능 중복, 기능 쇠퇴 사업 등 민간위탁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 재구조화
 - ※ '23년 사무 재구조화 : 총 36건(종료 14건, 통폐합 10건, 운영방식 전환 12건)
- 수탁기관 운영 실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컨설팅
 - 위탁기간 종료 도래 수탁기관의 사업성과 및 사용자 만족도 등 평가
 -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 47건 완료, 종합성과보고회 개최('23. 11월)
 - 협약 체결 당시 수립한 성과지표의 지속적 점검 및 컨설팅 지원(177건)
-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회계감사 및 상시 지원체계 확립
 - 종전 10억원 미만에서 모든 사무로 통합실시 확대(타 법령에 따른 실시 사무 등 제외)
 - ※ 2022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 총 363건(회계절차, 물품관리, 세법 관련 지적 178개 사무 개선)
 - 주요 회계처리 기준 중점 교육(9월 2회) 및 전담 회계·노무전담 현장 컨설팅(560건) 실시

□ 향후계획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안내 : '23.12월
 - 민간위탁 조례 개정, 관련 제도 및 표준협약서 변경 사항 등 반영

□ 재구조화 : 총 36건(종료 14건, 통폐합 10건, 방식 전환 12건)

- 종 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행정사무를 종료하고 시설 폐쇄
- 통 폐 합 : 기능이 유사하거나, 권역별 운영하던 사무를 통합하여 운영
- 방식전환 :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외 방식(직영, 대행 등)으로 수행

□ 운영종료 : 14건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최초 위탁일	위탁 종료일	비고
1	행정국 자치행정과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관리 및 운영	2018.01.09.	2023.01.08.	
2		마포 마을활력소 관리 및 운영	2018.02.14.	2023.02.13.	
3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2018.04.09.	2023.02.28.	
4	노동정책실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서울시 중소기업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2012.09.24.	2023.02.28.	
5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2016.01.01.	2023.03.31.	
6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서울 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2020.04.01.	2023.03.31.	
7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20.04.10.	2023.04.09.	
8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관리 및 운영	2017.05.10.	2023.05.09.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관리 및 운영	2004.02.14.	2023.05.14.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은평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관리 및 운영	2017.09.01.	2023.06.30.	
1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관리 및 운영	2020.06.08.	2023.08.31.	
12		서울여담재 관리 및 운영	2020.11.01.	2023.10.31.	
13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서울시 삼각산시민청 관리 및 운영	2018.03.14.	2023.12.31.	
14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2015.03.13.	2023.12.31.	

※ 상기 연번은 위탁종료일이 빠른 순서로 작성됨

□ 통 폐 합 : 10건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최초 위탁일	위탁 종료일	비 고
1	행정국 시민협력과	서울시 NP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19.11.15.	2023.02.12.	서울시 NPO지원센터
2		동남권 NPO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20.03.05.	2023.03.04.	
3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제1관 운영	2022.01.01.	2023.02.28.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4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제2관 운영	2021.03.18.	2023.02.28.	
5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2020.04.01.	2023.03.31.	독립영화지원 및 영화창작공간
6		영화창작공간 운영	2020.04.01.	2023.03.31.	
7	노동공정성생정책관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20.12.01.	2023.11.30.	노동 권익센터
8	노동정책담당관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020.12.18.	2023.12.17.	
9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시 청년허브	2012.12.14.	2023.12.12.	청년활동 지원센터
10	청년사업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16.07.15.	2023.12.31.	

□ 운영방식전환 : 12건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최초 위탁일	위탁 종료일	비 고
1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관리 및 운영	2020.09.01.	2023.04.30.	고유사무 (디자인재단)
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시 9호선 2-3단계 관리 및 운영	2014.09.05.	2023.09.30.	공공위탁 (교통공사)
3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서울무역전시장 관리 및 운영	2005.10.01.	2023.12.31.	공공위탁 (SBA)
4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서울시 시민청 관리 및 운영	2012.11.01.	2023.12.31.	직영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관리 및 운영	2008.01.21.	2023.12.31.	민간보조
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관리 및 운영	2008.11.05.	2023.12.31.	민간보조
7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체부 관리 및 운영	2018.01.01.	2023.12.31.	용역
8	노동공정성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2018.03.26.	2023.12.31.	용역
9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현대A) 관리 및 운영	2021.04.01.	2023.12.31.	공공위탁 (SH공사)
10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 및 운영	2003.01.01.	2023.12.31.	대행
11	물순환안전국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 및 운영	2002.09.05.	2023.12.31.	대행
12		중량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2018.03.19.	2023.12.31.	대행

3

市 위원회 효율적 정비 및 운영 개선

낮은 개최실적 등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및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市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시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지적·건의 사항('22.11.14. '22년 행정사무감사) 〉

- ◆ 비효율, 유사·중복 등의 사유로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출석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정 비) 운영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 위원회 대폭 정비
- (제도개선) 위원회 신설 엄격화, 위원 출석률 제고 등 운영 내실화

※ 위원회 현황('22년 말 기준)

- (위원회 및 위원 수) 254개 / 4,645명
 - ▶ (위 원 회) 254개로 최근 10년간 지속적 증가 ('13년 136개 → '22년 254개)
- (회의횟수) 연간 총 1,994회,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 7.8회
 - ▶ '22년 기준 1회 이하 회의 개최 위원회는 76개로 전체의 30.0% 차지

□ 추진내용

- (정 비) 정비대상 65개 위원회 중 32개 정비추진 완료
 - 정비대상 : 65개 (정비방법 : 조례개정 55, 법령개정 건의 10)
 - 추진완료 : 32개 (정비완료 22(조례개정 / 비상설 14, 폐지 6, 통합 2), 법령 개정 건의 10)
 -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개정이 필요한 10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23.4.)
- (제도개선)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출석률 관리 체계화 제도개선 추진
 - 위원 출석률 저조시 해촉 가능 규정 신설 및 회의 통보기한 연장('23.3.)
 - 위원회 신설 엄격화, 비상설 운영 원칙, 존속기한 연장 사전 협의 신설 등('23.7.)
 - 출석률 등 위원회 현황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시스템 구축('23.6.~11.)

□ 향후일정

- 정비대상 위원회 조례개정 추진(계속) : '23. 10월~
- 위원회관리시스템 구축 및 '23년 실적입력 : '23. 11월~12월

붙임

위원회 정비 추진실적('23.9월말 기준)

□ 추진실적 : 총 32개 완료 (정비완료 22개, 법령 개정 건의 10개)

구분		위원회명
정비완료(22) (※ 조례개정)	비상설(14)	창업정책위원회, DMC기획위원회,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수소산업육성위원회
	폐지(6)	희망경제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통합(2)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 감정노동종사자위원회,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법령개정 건의*(10)	비상설(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공동구협의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4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 강화

국가위임사무 등 전국 공통사무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 우리 시의 우수한 시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정 신뢰도 제고 추진

〈 주요 지적·건의 사항('23.2.28. 제316회 임시회) 〉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너무 낮음.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필요

□ 추진방향

- 정량정성지표별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평가수검자문단' 구성·운영
- 실·국·본부별 지표관리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 추진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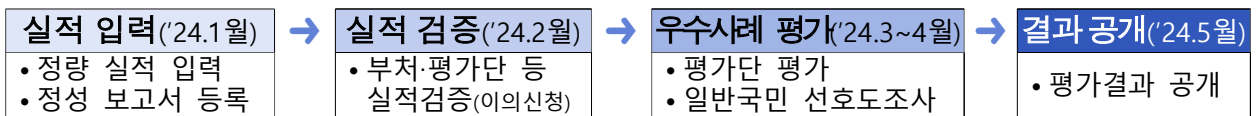
※ '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 정량평가 : 74개 지표 목표 달성률 78.4% ※ 전년 대비 3.4%p 상승
- ▶ 정성지표 : 22개 지표 중 7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 시부 2위 달성
- ▶ 국민평가 : 전국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로 우리시 1개 선정 ※ 시부 2위 달성

○ '24년('23년 실적)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국가위임사무 대상, 17개 시·도 ※ 시부와 도부 구분 평가
- (평가지표) 정량 78개, 정성 18개, 국민 2개 ※ 정성·국민지표는 우수사례 제출선정

< 수검 일정 >



○ 평가결과 향상을 위한 주요 수검전략

- (평가수검자문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 우수사례 분야별 컨설팅 추진
- (실·국담당책임제) 평가담당관 내 실·국별 담당과 지표 담당부서 협조 강화
 ※ 매월 정량지표 실적 관리 및 각 지표별 지원을 통해 이중 검토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정량지표 실적관리 및 정성지표 성과요약서 컨설팅·작성 : '23.10월~
- 행안부 지방행정평가시스템(VPS)에 최종성과 제출 및 실적검증 : '24.1월~

□ 정량평가 74개 지표 중 58개 달성(목표달성도 78.4%)

국정목표	지표 번호	평가지표명	달성현황
I.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1-2-가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달성
	1-1-2-나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를	달성
	1-2-7-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달성
	1-2-10-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달성
	1-2-10-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달성
	1-3-11-가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달성
	1-3-11-다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달성
	1-3-13-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을	달성
II.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2-4-16-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달성
	2-4-16-나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달성
	2-4-16-다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달성
	2-4-19-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달성
	2-4-21-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추진	달성
	2-4-21-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달성
	2-6-29-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	달성
	2-6-29-나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달성
	2-6-30-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	달성
	2-6-31-가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달성
	2-6-31-나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달성
	2-6-31-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 이행률	달성
	2-8-38-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미달성
III.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9-43-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달성
	3-9-43-나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율)	달성
	3-9-44-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사항 적기 처리 및 통보	달성
	3-9-46-가	가정위탁보호 내실화율	달성
	3-9-46-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미달성
	3-9-46-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	달성
	3-9-46-마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	달성
	3-9-46-바	아동급식 지원단가 준수율	달성
	3-9-46-사	아동학대대응체계 내실화율	달성
	3-9-48-나	반려동물 등록률	달성
	3-9-48-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달성
	3-9-48-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달성
	3-9-48-마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도	달성
	3-9-48-바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달성
	3-9-48-사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달성

국정목표	지표 번호	평가지표명	달성현황	
Ⅲ.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9-48-자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달성	
	3-10-49-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 실적	달성	
	3-10-50-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미달성	
	3-10-50-나	비정규직 남용 방지	미달성	
	3-10-52-가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미달성	
	3-10-52-나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미달성	
	3-11-56-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미달성	
	3-11-60-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달성	
	3-11-62-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달성	
	3-12-65-가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달성	
	3-12-65-나	민방위대(통리·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미달성	
	3-12-68-가	식중독 발생 관리율	달성	
	3-12-68-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달성	
	3-12-68-다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	달성	
	3-12-68-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미달성	
	3-12-69-가	도로명판 확충	달성	
	3-12-69-나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달성	
	3-12-69-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달성	
	3-13-70-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달성	
	3-13-70-다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달성	
	3-13-70-라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달성	
	3-13-70-사	산림병해충방제	달성	
	3-13-71-가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달성	
	3-13-72-다	GAP 인증 농가 확대	미달성	
	3-13-72-라	농지대장 정비율	달성	
	3-13-72-마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감소율	달성	
	3-13-72-바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달성	
	Ⅳ.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16-86-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미달성
		4-16-89-가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달성
	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18-94-가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	달성
5-18-95-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미달성	
5-19-101-가		관리적 정보보안 분야 사이버 공격·위협 예방·대응 실태 개선여부	달성	
5-19-101-나		기술적 정보보안 분야 사이버 공격·위협 예방·대응 실태 개선여부	미달성	
5-19-101-다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 분야 실태 개선여부	달성	
5-20-109-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미달성		
Ⅵ.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21-111-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달성	
	6-21-114-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달성	
	6-23-120-가	지역통계 확충 실적	달성	

□ 정성평가 22개 지표 중 7개 우수사례 선정(시부 2위 달성)

국정 목표	지표 번호	평가지표명	우수사례 선정
I.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1-3-11-나	디지털 전환 대응 우수사례	미선정
	1-3-15-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선정
III.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3-9-46-다	저출산 대책(임신, 출산 지원 등) 우수사례	선정
	3-9-48-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	미선정
	3-9-48-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우수사례	미선정
	3-11-56-가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선정
	3-11-56-나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행정 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3-11-56-라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	미선정
	3-11-60-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	미선정
	3-12-6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	선정
	3-12-66-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활동 우수사례	미선정
	3-13-70-아	목재이용 우수사례	미선정
IV.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4-15-85-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미선정
	4-16-89-나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	미선정
	4-17-92-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	미선정
V.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5-20-104-가	총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미선정
	5-20-110-가	보훈정신 확산 우수 사례	선정
VI.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6-21-111-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미선정
	6-21-111-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시책 추진 우수사례	미선정
	6-21-112-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 우수사례	선정
	6-21-112-나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미선정
	6-21-114-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미선정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①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권익구제 강화

②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③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④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운영의 법률적합성 확보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 심판위원 : 정원 50명 이내 / 현원 36명 (외부 31명, 내부 5명)
- 회의운영 : 매월 2~3회 (※ 2023년 26회 예정)

행정심판 운영 실적 (23.10.10.기준, 단위: 건)	청구건수	재결건수	인 용	기 각	각 하
	1,187	832	179(22%)	449(54%)	204(24%)

- '23년 예산 : 262백만원

□ 추진내용

-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 코로나19 이후 행정심판 청구 증가로 회의를 2회 증회 운영(24회→26회)
 - ※ 심판 청구건수 : 1,072건('21년) → 1,061건('22년) → 1,187건('23.10월)
- 사회·경제적 약자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국선대리인 적극 연계**
 - '22. 1월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 확대로 신청 건수 증가 추세
 - ※ (기존) 기초수급자 등 복지 수혜자 → (확대) 기존 +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자
 -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 4건/16건('21년)→18건/19건('22년)→15건/17건('23.10월)
 - 자치구 민원실·주민센터·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등 주민접점장소 중심 안내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심판 주요사례 공개**('23. 3월~)
 - 위원회 재결시마다 주요사례(3건 이상)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등재
 - ※ (기존) 연1회 재결레집 제작·배포 → (변경)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에 주요 재결 사례 등재

□ 향후계획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 : '23. 11월

□ 분기별 현황

('23. 10. 10. 기준, 단위: 건)

연도	2023.10월					2022년					2021년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구 건수	1,187	346	454	359	28	1,061	244	213	279	325	1,072	252	278	278	264

□ 분야별 현황

('23. 10. 10. 기준, 단위: 건)

연도	청구총계	보건복지	정보공개	건설교통	문화관광	산업자원	환경	기타
2023.10월	1,187	378	318	239	28	6	3	215
2022년	1,061	382	192	290	20	14	2	161
2021년	1,072	390	138	337	21	40	4	142

- 보건복지 : 일반음식점, 장애정도 결정,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청구
- 건설교통 : 운수과징금, 건축이행강제금, 택시운전자격, 변상금,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청구
- 문화관광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여행업 등 관련 청구
- 산업자원 : 담배소매업, 원인자부담금 등 관련 청구
- 환경 : 환경개선부담금,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청구
- 기타 :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처분 등 관련 청구

2 시민권의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강화

〈 주요 지적·건의 사항('22.11.14, '22년 행정사무감사) 〉

- ◆ 불친절 변호사 해촉 기준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 실효성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변호사법무사 배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상담 실시
- 추진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마을변호사(850명)	42,901	14,483	15,162	13,256
마을법무사(239명)	3,822	891	1,578	1,353

※ 마을법무사 사업 시행 : '21.6월 ~

- '23년 예산 : 836백만원

□ 추진내용

- 사업참여자와의 **소통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불친절 등 민원 유발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해촉 기준 마련('23.3월)
 - 변호사·법무사 및 동담당자 등 현장의견 청취 및 적극적 활동 독려
 - ※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2회('23.2월,8월), 마을법무사 실무협의회 1회('23.6월)
-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마을변호사 만족도 : ('22년) 82.15점 → ('23년) 82.6점
 - 마을법무사 만족도 : ('22년) 80점 → ('23년) 81점
-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참여자 유공 표창**
 - 인쇄홍보물, 자치구 소식지 활용 등을 통한 시민 근접 홍보 수행
 - 변호사·법무사 유공 표창을 통한 공익활동 자긍심 고취('22년 44명 표창)

□ 향후계획

-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유공 표창 (50명 예정) : '23.12월

3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시민 생활 및 주요 시정과 관련성이 높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 추진방향

- 시민생활과 시정 전반에 직접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제도 발굴 및 개선
-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전략적 규제혁신 추진

□ 추진내용

- **시정 쏠 분야에 걸쳐 과도한 규제 등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 지자체 자율성 확대, 관광 활성화 등 개선과제 91건 발굴건의('23.1~9월 현재)

2023년 주요 건의과제

- 도시공원 국유지 무상 사용 근거 마련
 - (문 제 점) 국유재산법 상 비영리공익사업으로 국유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 (현행은 1년까지 사용료 면제)
 - (건의사항) 지자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 하천법상 시·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 확대
 - (문 제 점) 환경부의 하천 점용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불허될 경우 과도한 매몰비용 발생
 - (건의사항)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 건의
-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 확대(외국인→내·외국인)
 - (문 제 점) 도시민박업(공유숙박) 이용대상은 외국인에 한정되어 무등록 숙박업자의 불법 숙박 영업 발생
 - (건의사항) 도시민박업(공유숙박) 이용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 **주요 건의과제 모니터링 및 다양한 건의 창구를 통해 과제 수용성 제고**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협업 및 지속적 과제관리를 통해 수용성 제고
 - 국무·차관회의,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을 활용하여 주요 규제개선 노력

□ 향후계획

-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지속 발굴 및 건의 : '23.11월~12월
- 주요 이슈별 개선과제 발굴건의 : 연중 수시

□ '23년 대정부 건의 현황

(단위 : 건, '23. 9월말 기준)

연도	총계	중앙부처 의견			중앙부처 검토 중	자체종결
		소계	수용	불수용		
2023. 9.	91	30	8	22	61	0

□ 주요 건의과제(중앙부처 수용의견 8건, 개선 예정)

연번	주요내용	법안명	소관부처
1	○ 학교 증축비용 및 학교용지 처분 수입에 대한 분담·배분비를 명확화 ※ (문제점) 학교 증축비용에 대한 시·도 및 교육청 간 분담비율과 학교용지 처분 수입에 대한 배분비율 부재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교육부
2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 이양(산업부장관→시·도지사 포함) ※ (문제점)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이 산업부장관에게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 불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3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탄력적 운영 ※ (문제점) 기관별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구성·운영으로 예산·행정력 낭비	·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기준 및 근거 규정 신설 ※ (문제점) 정당현수막 설치에 대한 별도의 신고나 허가절차 등이 부재하여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미관저해·안전 위협 우려	· 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5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교육이력 조회 기능 개선(영업자 성명, 생년월일로 교육이력 조회 가능) ※ (문제점) 식품위생교육 관리를 위한 교육이력 조회가 업소명과 인허가번호로만 가능하여 사업자가 전국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조회 곤란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6	○ 주택법상 지도·감독 대상 확대(리모델링주택조합→지역·직장주택조합 포함) ※ (문제점)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지도·감독 대상인 사업주체에 미해당하여 관리감독 곤란	· 주택법	국토교통부
7	○ 예금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 서비스 허용 근거 규정 마련 ※ (문제점) 금융상품판매대리 또는 중개업자가 예금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8	○ 대출모집인이 둘 이상의(다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와 계약체결 허용 ※ (문제점)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어 다양한 서비스 곤란(1사 전속주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금융위원회

4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운영의 법률적합성 확보

정책수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전문적 법률지원을 통해 업무수행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여 법치행정 구현 및 원활한 시정 운영 지원

〈 주요 지적·건의 사항('22.11.14, '22년 행정사무감사) 〉

◆ 승소 관련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소송 통합 수행, 사전 법률자문 및 계약·협약 검토
- '23년 예산 : 6,489백만원

□ 추진내용

- **소송통합 수행 체계화**를 통한 승무지원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소송수행 현황 : '23년(9월) 1,094건 수행, 승소율 80.6% ※'22년 80.3%, '21년 75.5%

(단위 : 건)

구 분	총 수행 건 수			소 종 결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	패 소	기 타	
2023. 9월	1,094	785	309	347	204 (80.6)	49	94	747

-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규칙 개정)를 통한 **소송비용 회수의 엄격화**
 - '22년 행감 이후('22.11월~'23.9월), 회수건수 189건, 회수액 1,064백만원
 - ※ '22.1월~'22.10월 기준 회수 현황 : 회수건수 28건, 회수액 425백만원
- **정책 수립·집행 시 법률 해석, 소송 등 업무 관련 적극 법률자문 지원**
 - 연구원 통합지원단 관련 자문 등 TF 참여 : 총 5건
 - 도시계획시설 지정·민간위탁·인허가 등 시정현안 법률자문 : 총 937건('23.9.)
- **법률·재무적 적정성 심사**로 공정한 계약체결과 시 재정건정성 강화
 - 민간위탁, 공유재산·임대차 등 계약·협약 사전 검토 : 총 257건 심사('23.9.)

□ 향후계획

- 시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 상시

3. 건전한 재정·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①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② 공공기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공공가치 제고

③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④ 홍보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 관리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편성·집행·평가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집중심의 강화로 **불요불급·부적정 집행사업 신설·연장 최소화**
 - 공모사업 기준 금액 하향(3억원 → 2억원) 등 집중심의 대상 확대
- 성과평가 대상 확대 및 성과평가 실효성 강화로 **재정 환류 기능 활성화**
 - 기금 보조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추진내용

- (예산편성) '23년 추가경정예산 및 '24년 본예산 요구안 **사전심의**
 - ['23. 추경] 총 93건(2조 9,754억원) 심의, 적정 85건, 조건부 7건, 부적정 1건 의결
 - ['24. 본예산] 총 840건(5조 6,760억원) 편성 요구안 심의 ※ 제출일 기준 심의 진행 중
 - 예산편성 시 부적정 사업은 예산 미편성, 조건부적정은 감액 편성
- (성과평가) 2022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23.5~7월)
 - 총 821개 사업(4조 3,876억원) 평가, 지속 583개, 축소 26개, 폐지 212개 의결
 - 평가 결과는 '24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 미편성·삭감 등 조치
- (제도개선) 지방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실적보고서 위탁검증 실효성 증대를 위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 검토
 - 집중관리 대상사업 지정·통보 제도 도입을 통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강화 추진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개정 : '23.12월
- 지방보조사업 집중관리 등 시행계획 수립 : '23.12월

2 공공기여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공공가치 제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기여 자원(토지·건축물·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미래 서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주요시설 발굴 및 적기적소 공급
-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 자원의 중장기적·전략적 활용 모색

○ '23년 예산 : 500백만원

□ 추진내용

○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 통합·조정

- 공공시설 상시 모니터링(UPIS) 및 사·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시급한 필요시설 확충 및 광역 서비스 시설 공급
 - ▶ 결정고시 : 21개 시설, 추정금액 약 6,424억원 (현금 2,638억원 포함)
 - ▶ 준 공 : 7개 시설, 추정금액 약 1,013억원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 인구변화 등 미래 수요 대응 및 우리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시설 발굴, 효율적 공공기여 자산 관리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예정)

- ▶ 일시/장소 : 11.3(금)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 참석 : 국토학회, 기술사회, 국토교통부 등
- ▶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기여 통합관리 성과 및 과제, 공공기여 대상사업 및 제공범위 확대방안 등

○ 공공시설 설치기금의 광역 자원 관리를 통한 지역간 시설 불균형 해소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추진 중

□ 향후계획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 ~ '23. 12월

붙임 공공기여 통합관리 추진성과('23년)

○ 결정고시 : 21개 시설, 추정금액 약 6,424억원(현금 2,638억원 포함)

연번	사업명	위치	운영기관	시설용도	연면적 (㎡)	추정액 (억원)
합계(21개소)					65,360	6,424
1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거여동 549	송파구	사회복지시설	10,585	607
2	동작구 노량진동56-1번지 역세권청년주택	동작구 노량진동 56-1	동작구	공공청사	310	30
3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구 대치동 316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2,000	52
4	한남4재정비촉진사업	용산구 보광동 360	용산구	주치장	2,000	44
5			용산구	사회복지시설	4,100	400
6			용산구	공공청사	4,121	343
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3,000	185
8			서울시	공공청사	2,000	238
9			서울시	공공청사	1,500	179
10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시	공공청사
11	서울시, 용산구, 충구	현금			-	2,638
12	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교남동2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314	127
13	신당10 주택재개발구역	중구 신당동 236-100	서울시	문화시설	6,250	230
14	길음5구역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성북구 정릉동 175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4,427	233
15	성동구 행당동 319-36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성동구 행당동 319-36	성동구	공공청사	826	28
16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미포구 합정동 381-49	미포구	사회복지시설	5,030	220
17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역세권청년주택	성동구 마장동 339-2	성동구	공공청사	937	33
18	길음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성북구 돈암동 624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300	12
19	전농9주택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126-40	동대문구	공공청사	7,000	326
20	대흥, 성원, 동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로구 온수동 45-32	구로구	사회복지시설	800	20
21	천호동 53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강동구 천호동 532-2	강동구	체육시설	2,265	116

○ 준공 : 7개 시설, 추정금액 약 1,013억원

연번	사업명	위치	운영기관	시설용도	연면적 (㎡)	추정액 (억원)
합계(7개소)					10,395	1,013
1	목동택지개발(구)가스설비 지구단위계획	양천구 목동 900-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1,090	45
2			양천구	공공청사	1,271	49
3	둔촌동 삼익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둔촌동 85-2	강동구	청소년 복지센터	1,397	95
4	모래내서중양대 시장정비사업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	서대문	문화시설	1,166	63
5	화곡중앙 시장정비사업	강서구 화곡동 370-76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215	38
6	동부청과 시장정비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39-1	동대문구	공공청사	2,726	608
7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620-47	동대문구	문화시설	2,530	115

3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시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경과

-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 '22.9.5.
- 기관별 혁신계획 제출(기관→서울시) : '22.10월

□ 추진현황 ('23.9월 기준)

① 구조개혁분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기능조정·협업 등 추진)

-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분야 추진은 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

합계	완료	정상추진	중단	지연
132건	100건	28건	3건	1건

- 코로나 종식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일부계획은 중단 및 지연

사업명(기관)	구분	변경 사유
유사 공연기획 기능조정(시향)	중단	정기공연 수요 등 시민공연 확대 필요성 감안해 현 체계하에서 효율적 운영 결정
기업회의 마케팅 축소(관광)	중단	엔데믹으로 관광수요 회복하여 기업회의 등 마케팅 재추진
영상제작기능 통합(TBS)	중단	자체혁신계획 수행 등을 위해 향후 재검토
송신소 무인화(TBS)	지연	자체혁신계획 수행 등으로 향후 재검토

② 재무건전성(자산 건전화)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화)

《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 혁신계획(자산건전화) 제출 내용('22.11월) 》

구분	예산절감 (단위:백만원)	주요 내용 ('27년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86,399	(교통) 토지·건물 등 5건, 2년이상 미사용 전동차량 502칸
출자회사 정비	2,300	(교통) 김포골드라인운영(주), (SH) 사회주택위탁관리 등
청사 정비	8,658	청사 임대 2,977백만원, 임대 확대 3,609백만원, 임차면적 축소 2,072백만원

○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 ('23년 8,734.4백만원 절감)

- 비핵심자산 매각(68억) : 전동차량 230칸, 경춘선 편입토지 매각<교통>
- 청사정비(19억) : 자체청사 임대<교통, SBA, 세종, 여성>, 임차청사 축소<50+, 관광>
- 서울시 산하기관은 행안부 가이드라인 상 정비기준(99㎡)을 초과한 사례는 없으나 기관장 사무실을 자발적으로 정비(시설공단 23.77㎡ 축소)한 사례도 있음

③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지방공무원 수준 상회하는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점검결과(22.11월) 》

○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개선 필요사항) : 전체 26개 기관, 총 122건

- 모든 기관 최소 1건 이상(공기업 : 2건~9건, 출연기관 : 1건~12건)

○ 주요 미준수 사항

- ① 사내대출 이자율·한도, ② 과도한 유급휴일·휴가,
- ③ 기념일(명절, 생일 등)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과도한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
- ④ 업무 외 부상·질병에 대한 의료비 별도 예산 지원 등

○ 복리후생 분야 122건 중 24건 개선완료

- 하반기 단체협약 교섭 중이거나 예정인 기관은 노조와 본교섭을 통해 협약 및 내규 개선 추진 중

주요 개선 내용	기관 명 (개선일)
기념일 문화상품권(기념품) 등 지급	의료원('23.2.27.), 복지('23.9.12.), 디지털('23.4.17.), 120다산콜재단('23.9.11.)
선택적 복지제도와 단체보험 별도 운영	물재생('23.5.2.), 복지('23.2.16.), 50플러스('23.1.18.)
경조사 휴가 일수(또는 추가휴가 운영)	세종('23.5.24.), 여성('23.2.28.), 문화('23.2.28.)

□ **향후일정**

- 23년 하반기 추진실적 제출 (기관→市) : ~'23.11월
- 서울시 경영혁신 추진사항 제출 (市 →행안부) : '23.12월(예정)

4 홍보 강화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말 집중 홍보를 통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지적·건의 사항(’23. 2. 28, 제316회 임시회) 〉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반려 식물’을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 제도개요

- 개인(법인 불가)은 주소지(광역시, 기초)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증진사업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시 16.5%) 제공

□ 추진내용 (9.30.기준)

- (모금실적) **67,388천원 / 1,366건** ※ ’23. 7월 이후 모금액 상향 추세로 연말 모금액 증가 전망
- ’23. 7월 이후 월별 모금실적 상향 추세로, 연말 모금액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답례품 선정) 기부자의 선호를 반영한 **매력적인 답례품 지속 발굴**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답례품 19종 중 10종 신청, 총 632건 18,632천원 지출
※ 제316회 임시회 주요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개선으로 ’23.5.4. ‘반려 식물’ 답례품 추가선정

연번	답례품	건수	금액 (천원)	연번	답례품	건수	금액 (천원)
1	서울사랑상품권	576	16,988	6	한강 분리수거 멀티틀	3	75
2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	22	640	7	롯데월드 이용권 (아쿠아리움, 어드벤처)	2	76
3	경복궁 쌀(10kg)	13	383.5	8	반려 식물	2	60
4	황실 배(5kg)	7	210	9	한강유람선 승선권	1	29.9
5	N서울타워 입장권	5	150	10	자개 볼펜	1	20

- (제도·모금 홍보) **잠재적 기부자들**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홍보**
- 광역버스 외부광고(4. 1. ~ 5. 31.), 유튜브 “슈카”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게시(5.4.)
-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 박람회에 참가하여 서울시 홍보관 운영(9.2. ~ 9.4.)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22개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4,910명 방문. 시 예산 28,922천원 소요

□ 향후계획

- **시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연말 집중 홍보를 통해 **모금실적 제고** : ’23. 12월
- 매력적인 답례품 추가선정으로 **시 기부 유인** : ’23. 12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기획조정실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9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59	54	4	1	-
	시정·요구사항	28	26	2	-	-
	건의사항	15	12	2	1	-
	기타(자료제출 등)	16	16	-	-	-

시정 요구사항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공공기관이 당사자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음.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함.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객관적 소명을 전제로 한 경제적 무자력자,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등으로 엄격화 -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기한 설정 등 회수방안 구체화 ○ 승소 확정된 사건 중 소송비용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회수 및 독촉 절차 진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행감 이후('22.11월~'23.9월), 189건, 1,064백만원 회수 ※ '22.1월~'22.10월 기준 회수 현황, 회수건수 28건, 회수액 425백만원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명시신청 등 민사집행절차(고액 체납자 순)를 통한 적극 회수 지속 추진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활용률이 낮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 미반영 연구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성이 담보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사전검토회 신설 및 심사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부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 자체연구 수행 가능 여부 확인 후 연구 수행 - (변경) 내외부 위원과 연구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검토회를 신설하여 연구원 수행과제 선정시 시정활용도 필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신청서에 활용계획을 명시하도록 함 ○ 연구원 주도가 아닌 서울시 활용 가능한 정책 중심의 연구과제 시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 높은 ‘시책연구과제’ 및 ‘정책연구과제’ 비율 상향, 연구원 주도의 ‘기초연구과제’ 비율 하향 <table border="1" data-bbox="595 1301 1425 1554">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4">자체연구</th> <th rowspan="2">수탁 연구</th> </tr> <tr> <th>정책</th> <th>시책</th> <th>현안(수시)</th> <th>기초</th> </tr> </thead> <tbody> <tr> <td>2023.9</td> <td>53건 (24%)</td> <td>12건 (5%)</td> <td>94건 (43%)</td> <td>21건 (10%)</td> <td>39건 (18%)</td> </tr> <tr> <td>2022</td> <td>45건 (19%)</td> <td>0건 (0%)</td> <td>103건 (42%)</td> <td>43건 (18%)</td> <td>52건 (21%)</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수행과제 활용현황 관리 지속 	구분	자체연구				수탁 연구	정책	시책	현안(수시)	기초	2023.9	53건 (24%)	12건 (5%)	94건 (43%)	21건 (10%)	39건 (18%)	2022	45건 (19%)	0건 (0%)	103건 (42%)	43건 (18%)	52건 (21%)
구분	자체연구				수탁 연구																		
	정책	시책	현안(수시)	기초																			
2023.9	53건 (24%)	12건 (5%)	94건 (43%)	21건 (10%)	39건 (18%)																		
2022	45건 (19%)	0건 (0%)	103건 (42%)	43건 (18%)	52건 (21%)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최근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통공사와 주택공사 등 2023년 공사채 발행 예정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부채관리 등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부채비율 200% 이상 기관에 대하여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비율 관리목표 강화(200%→180%), 이행실적 평가 및 기관별 성과보고 개최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상반기 교통공사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3,700억) ※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1552(2023.5.19., 2023년도 상반기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 심의결과 알림) ○ 교통공사 지방공사채 발행(3,700억원) : '23. 9월 ○ 교통공사 재정안정화를 위한 市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한 市 출자금, 공사채 상환 지원 및 운영비 지원 등 '23년 총 7,832억원 재정지원 - 대중교통요금 인상(1,250원 → 1,400원, '23.10.7)으로 '23년 약 355억원 수입 증가 예상, '24년 추가인상(150원)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요금 인상 완료(1,550원) 시 연 수입 약 3,500억 증가 예상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별빛 신사리 르네상스 사업 예산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 지침은 법률상 소급 불가능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지침의 법적 위배 가능성 검토 및 불합리한 예산 지원 중단 재고 필요함 (상권활성화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신청 당시 관악구는 지방비 전액을 구비로 편성한다는 약속서를 제출하였음 ○ 지침 소급적용은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이었음 <p>※ 법률자문결과('23.1.12.) 투자심사 결과 상 기재된 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사업 지침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소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p>
<p>5. 비효율적이거나 필요 없는 위원회 정비가 필요해 보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보하여 위원회 기능 및 운영의 효율적·지속적 정비가 필요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효율화 제고 위해 '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23.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비) 총 65개 (254개 중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유형 : 비상설 27, 폐지 8, 통합 30(38→8) ▶ 정비방법 : 조례개정 55, 법령개정 건의 10 - (운영개선) 위원회 신설억제 제도화,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원 출석률 관리 체계화 ○ 정비실적('23.9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 22개 정비완료(비상설 14, 폐지 6, 통합 2) ▶ 법령개정 : 10개 법령 개정 건의 완료('23.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비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6. 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과반수를 겨우 넘긴 위원회가 대다수임. 위촉된 위원들의 책임감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석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 위원의 출석률 제고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석률 저조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규정 신설('23.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단위 출석률 50% 미만일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가능 ○ 위원회관리시스템 구축 ('23.6.~11.) : 위원별 출석현황 정보 입력 및 출석률 관리
<p>7. 대림역 일대는 G밸리, 여의도 금융 중심 등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도심물류 창고 등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공공자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부지 내 도심물류 창고 등을 도입하는 기존계획의 타당성 조사(~'23.2월) 결과, 시설 간 상충 등 도입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 전반을 재검토 ○ 현재 '(가칭)서울디딤플라자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어 추진중이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최적의 시설용도와 사업방식을 도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기간 : '23.09.18.~'24.07.17.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속)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신당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등의 채용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신설 건의(행정안전부) : '22.10.6.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개정완료 : '22.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란물 유포 등 온라인 성범죄를 결격사유에 포함 ○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관별 인사규정 등 정비 요청 : '23.1.19. <p>⇒ '23.9.30. 기준 26개 기관 정비완료</p>								
<p>9. 마을변호사 중에 불친절하면 해촉을 하고, 상담 만족도가 높으면 인센티브를 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해 보임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변호사 제도 자문 기구인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불친절·불성실 변호사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불친절 관련 민원 제기 횟수에 따른 활동 제한 규정 신설 <table border="1" data-bbox="619 1458 1433 1615"> <thead> <tr> <th>민원 제기 횟수</th> <th>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2회</td> <td>민원 지속 제기 시 활동 중단 및 해촉이 가능함을 서면으로 고지</td> </tr> <tr> <td>3회</td> <td>일정기간(1~3개월) 마을변호사 활동 중단</td> </tr> <tr> <td>3회 초과</td> <td>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해촉 건의 → 해촉</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관계 왜곡·허위성 민원으로 파악된 것은 누적횟수에서 제외 ○ 친절한 상담 등 활동 실적이 우수한 마을변호사를 매년 표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마을변호사 23명, 마을법무사 21명 표창장 수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변호사 표창 : '23.12월 중(50명) ※ '24년 표창인원 증원 요청 예정(자치행정과 협조) 	민원 제기 횟수	조치사항	2회	민원 지속 제기 시 활동 중단 및 해촉이 가능함을 서면으로 고지	3회	일정기간(1~3개월) 마을변호사 활동 중단	3회 초과	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해촉 건의 → 해촉
민원 제기 횟수	조치사항								
2회	민원 지속 제기 시 활동 중단 및 해촉이 가능함을 서면으로 고지								
3회	일정기간(1~3개월) 마을변호사 활동 중단								
3회 초과	실무협의회 의결을 통해 해촉 건의 → 해촉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0. 납세자 보호관을 법무담당관이 겸직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은 납세자보호관 1명과 이를 보조하는 세무공무원(세무6급) 1명을 두고 있음 ○ 우리시는 시세의 대부분 [9개의 시세 중 7개(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을 자치구에 위임 징수하고 있어 위임 시세에 대한 고충민원은 처분청인 자치구에서 1차적으로 먼저 민원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 납세자보호관은 서울시 부과·징수 시세에 대한 민원, 자치구의 민원처리 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나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민원을 처리(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하고 있어 현재의 업무처리 분량은 겸직이 가능한 수준임 <p>※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시에서 직접 징수</p> <p style="text-align: center;">〈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연 도</th> <th style="width: 25%;">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th> <th style="width: 25%;">세무상담</th> <th style="width: 35%;">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23.9월 현재</td> <td>2</td> <td>74</td> <td>76</td> </tr> <tr> <td>'22년</td> <td>3</td> <td>107</td> <td>110</td> </tr> <tr> <td>'21년</td> <td>3</td> <td>67</td> <td>70</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연 도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합 계	'23.9월 현재	2	74	76	'22년	3	107	110	'21년	3	67	70
연 도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합 계														
'23.9월 현재	2	74	76														
'22년	3	107	110														
'21년	3	67	70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세무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함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임용하여 납세자보호관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 담당으로 세무직 공무원(세무6급)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후 업무량 증가 등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음
<p>12. 전임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대북 관계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남북협력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국(局) 단위 조직이었던 남북협력추진단을 과(課) 단위로 축소('22.8.19.)하였고, ○ 업무 또한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지원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였음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3.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마을공동체 사업 등)은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조직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 강화('21.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운영방식 전환 및 통·폐합 - 인건비·운영비 과다 편성 방지 등 사업비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지침 개정(인건비 50% 이내 준수)하여 예산심의 강화 - 종합성과평가 75점(기존 60점) 미만 수탁기관 재계약 배제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 명확화(가족관계, 3년 이내 재직 등 이해관계자 위원회 참여 제한) ○ 채용 공정성 강화 등 수탁기관 부패 예방('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 금지, 가족·근무경험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성희롱 등 주요 비위행위 발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협약 해지 가능 - 재계약 10년 초과 시 공개모집 전환, 동일 기관 장기수탁 제한 - 종합성과평가와 같은 해에 별도로 특정감사 실시 가능토록 개선 ○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21.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의무화 및 사무별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 지도점검 계획 수립(매년 1월) 및 연 2회 이상 실시(연1회→2회) -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성과 60% 미만) 예산 교부액 조정 - 종합성과평가 시 감사 처분요구 사항 감점지표 신설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사무 재구조화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4. 투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부적정임에도 무분별하게 설립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에서는 출연기관 설립 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행안부 검토의견을 보완·반영하였으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경우 설립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행안부 최종의견이 있었음 ○ 그동안 투자출연기관 남설 및 인원 증원에 따른 비효율 등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어, 市 경영효율화 용역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별 혁신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22.1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기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
<p>15. 서울로 7017에 사단법인 마을이 개입되어 있음.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포함되어 검토할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7017 관리운영 직영 전환('22.1월) ○ 서울로7017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22.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임기제공무원의 위탁업체 컨소시엄 대표 겸임, 인건비 및 시설 보수 예산 낭비, 자격 미달 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지적 ○ 서울로7017 위탁업체 대표 수사 의뢰('22.9월 푸른도시여가국 → 관악경찰서)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6. 장애인 콜택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일부 시간대는 이용이 어려움. 확대가 필요해 보임 (택시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출퇴근 시간대 수요 집중으로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및 정규직 운전원 80명 증원 - 단시간 운전원 추가 채용(72명)으로 취약시간 투입 ○ 2023년 장애인콜택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한 증차 및 운전원 증원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30대 증차 및 정규직 운전원 38명 증원 - 단시간 운전원 추가 채용(150명)으로 취약시간 투입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수단 운영활성화 대책 등 추가 시행
<p>17.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사업평가 과정을 운영하며 위탁사업 선정에 엄중을 가했는데, 지금 와서 유독 특정 분야만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는 관행적으로 추진되어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시민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하여 사무 필요성 및 수행방식 적절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 그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음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8. 공무원 직접 학술용역은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구결과의 활용률도 낮음.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연구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개선계획 수립 및 지원 통한 연구결과 활용률 제고 추진('23.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실시 및 전문가 자문 통한 연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교육) 참고문헌 표기 등 보고서 작성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6. 27.(화), 서소문 1동 13층, 45명 참석 ▶(전문가 자문) 시 산하 연구원의 분야별 전문가를 연구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수시 연구 자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모든 연구팀(16개)에 시 산하 전문 연구원 매칭 완료 - 연구유형·평가지표 개선 통한 보고서 질 확보, 연구윤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유형) 신청단계부터 구분하여 연구방향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형/레포트형/기본계획형/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형 ▶(평가지표) 연구보고서 형식의 적정성 지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구분, 참고문헌, 표기 등 → 표절 방지 ○ 부실용역에 대한 벌칙 명확화로 연구수행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연구보고서 표절률 15% 이상: 연구비 1/2 반납 - 최종보고서 미제출(연구중단 포함): 연구비 전액 반납 - 최종보고서 수준 미달: 향후 2년간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제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교육 및 전문가 자문 지원 지속 추진 ○ 연구용역 점검·평가 및 관리 강화 등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9. 예산 절감 성과급 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전년대비 증액(증 10백만원) 하였고('23년 74백만원) ○ '23년 개선사항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17건, 59백만원 지급을 결정하였음(전년대비 지급건수 7건, 지급액 7백만원 증가) -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공무원의 직접 수행으로 행사 개최 예산 절감 시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검토 -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 완화(71점 이상 → 65점 이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시 예산성과금제 운영의 취지를 설명해 예산 절감 노력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하겠음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0.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 수 등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표 일부가 하향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22.12.~'2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4대 핵심 전략과 이행계획 제고를 위한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 지속가능발전 세부 사업의 이행 제고를 위한 지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2년 주기의 점검을 1년 주기로 변경, '22년도 성과지표 실적 현행화 및 달성현황 관리('23.6.) - '22년 104개 지표 점검 완료 및 3개 지표 통계치 미집계 <table border="1" data-bbox="603 1008 1430 133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분야</th> <th rowspan="2">성과 지표</th> <th colspan="5">이행상황 점검 분야별 달성 결과</th> </tr> <tr> <th>달성</th> <th>일부달성</th> <th>미달성</th> <th>사업 종료</th> <th>통계 미집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7개</td> <td>76</td> <td>19</td> <td>6</td> <td>3</td> <td>3</td> </tr> <tr> <td>사회 분야</td> <td>27개</td> <td>16</td> <td>9</td> <td>3</td> <td>0</td> <td>0</td> </tr> <tr> <td>경제 분야</td> <td>24개</td> <td>18</td> <td>3</td> <td>1</td> <td>0</td> <td>1</td> </tr> <tr> <td>환경 분야</td> <td>32개</td> <td>27</td> <td>2</td> <td>1</td> <td>1</td> <td>1</td> </tr> <tr> <td>협력 분야</td> <td>24개</td> <td>15</td> <td>5</td> <td>1</td> <td>2</td> <td>1</td> </tr> </tbody> </table> <p>※ '21년 달성 74, 일부달성 21, 미달성 7, 통계미집계 6</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3.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개선 방안 논의 및 재조정 예정 	분야	성과 지표	이행상황 점검 분야별 달성 결과					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사업 종료	통계 미집계	계	107개	76	19	6	3	3	사회 분야	27개	16	9	3	0	0	경제 분야	24개	18	3	1	0	1	환경 분야	32개	27	2	1	1	1	협력 분야	24개	15	5	1	2	1
분야	성과 지표			이행상황 점검 분야별 달성 결과																																												
		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사업 종료	통계 미집계																																										
계	107개	76	19	6	3	3																																										
사회 분야	27개	16	9	3	0	0																																										
경제 분야	24개	18	3	1	0	1																																										
환경 분야	32개	27	2	1	1	1																																										
협력 분야	24개	15	5	1	2	1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1. 서울시가 직면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이에 서울시는 인구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으나, 추진계획(시장방침)에 따른 실적이 부진함. 인구변화대응 전문가TF는 운영되는 8개월 동안 5차례 회의 개최에 그쳤으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되지 않고 있음. 인구영향평가 도입 등 향후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행정력 투입이 필요함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행정1부시장(위원장), 전문가(TF위원 포함), 관련 실·본부·국장, 시의원 등 15명 - (역할) 인구변화대응 기본·시행계획, 인구영향평가 제도, 인구정책 등 심의 - (운영) 총 3회 : 정기회의(1회) 및 자문회의(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출석, '23.1.3.), 자문회의(서면, '23.1.4.), 자문회의(출석, '23.5.11.) ○ 인구영향평가 정책연구 및 시범 적용 사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3.~9.) -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용역 추진(서울시립대, '22.10.~'23.2.)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용역결과 : 4개 분야 20개 사업 선정 및 분야별 정책 합의 제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 중요 정책 합의(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 구조</td> <td>▶ 도시공간 다양성 ▶ 보행 가능 생활권 ▶ 접근 기능성(단위 생활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 경제</td> <td>▶ 글로벌 인재 유치 ▶ 생활성(Liveability)</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 주거</td> <td>▶ 주거 규제 완화 ▶ 도시 다양성 ▶ 주거 품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도시 교통</td> <td>▶ 수요 반응형 대중교통 ▶ 자율주행 대중교통</td> </tr> </tbody> </table>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영향평가 부서 자체 평가 및 전문가 심층 평가('23.5.~9.) - 소관부서 공유 및 시정 반영 권고('23.1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3.11. 	분야	분야 중요 정책 합의(평가 기준)	도시 구조	▶ 도시공간 다양성 ▶ 보행 가능 생활권 ▶ 접근 기능성(단위 생활권)	도시 경제	▶ 글로벌 인재 유치 ▶ 생활성(Liveability)	도시 주거	▶ 주거 규제 완화 ▶ 도시 다양성 ▶ 주거 품질	도시 교통	▶ 수요 반응형 대중교통 ▶ 자율주행 대중교통
분야	분야 중요 정책 합의(평가 기준)										
도시 구조	▶ 도시공간 다양성 ▶ 보행 가능 생활권 ▶ 접근 기능성(단위 생활권)										
도시 경제	▶ 글로벌 인재 유치 ▶ 생활성(Liveability)										
도시 주거	▶ 주거 규제 완화 ▶ 도시 다양성 ▶ 주거 품질										
도시 교통	▶ 수요 반응형 대중교통 ▶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2. 시민참여 예산과 관련하여 공모가 7월에 끝났음. 평소에는 3월 이내에 끝났던 것이 많이 늦어졌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했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에는 지난 10년간 성과 및 과제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기간이 소요되어 운영계획 수립('22.7월) 및 이후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추진된 바 있음 ○ '23년에는 2월 운영계획 수립, 3~4월 시민제안사업 공모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6~8월 제안사업 심사·검토 등 관련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 ○ '23. 9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24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안) 제출 : '23.11월
<p>23.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최초 과업지시서에 없던 기관 통폐합 내용이 4월 중간보고 이후 갑자기 확장되었음. 기관 통폐합까지 과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는 정식 지침 변경 또는 신규 발주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발주시('21.10월) 과업내용에 기관별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동종·유사업무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기관 내 조정은 물론, 기관 간 기능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통폐합 방안 등도 연구가 가능한 범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 : 동종·유사업무(사업) 통폐합 등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 착수보고서 : 출연기관 기능의 중복·유사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유지, 분할 등 대안 구성하여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4. 경제성 분석 결과 1 미만이지만 투자심사 통과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정무적 판단이 사업추진에 우선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함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B/C)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주민생활편익, 지역경제 파급효과,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투자심사 통과 여부(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함 ○ 일부 청사·도서관·문화체육시설·주차장 건립 사업 등은 B/C가 1 미만이지만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었으며, 재원조달 가능 및 사업의 준비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통과되었음 - 최근 3년간('21~'23.9) B/C 1 미만 투자심사사업 74건 중 56건이 통과되어 통과율은 75.7%임 <p style="text-align: center;">〈최근 3년간 B/C 1 미만 사업 투자심사 통과현황〉 (단위 : 건, %, '23. 9월말 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638 1142 1444 1355"> <thead> <tr> <th rowspan="2">연도</th> <th rowspan="2">B/C 심사건수*</th> <th colspan="3">B/C 1 이상 사업</th> <th colspan="3">B/C 1 미만 사업</th> </tr> <tr> <th>심사건수</th> <th>통과건수</th> <th>통과율</th> <th>심사건수</th> <th>통과건수</th> <th>통과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90</td> <td>16</td> <td>15</td> <td>93.8</td> <td>74</td> <td>56</td> <td>75.7</td> </tr> <tr> <td>2023</td> <td>32</td> <td>7</td> <td>7</td> <td>100</td> <td>25</td> <td>17</td> <td>68</td> </tr> <tr> <td>2022</td> <td>19</td> <td>4</td> <td>4</td> <td>100</td> <td>15</td> <td>12</td> <td>80</td> </tr> <tr> <td>2021</td> <td>39</td> <td>5</td> <td>4</td> <td>80</td> <td>34</td> <td>27</td> <td>78.4</td> </tr> </tbody> </table> <p>* 市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전제사업에서 경제성 분석 (B/C)을 실시하고 투자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건수 기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부터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부서 대상 '맞춤형 컨설팅' (총 3회)을 진행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의 효과 제시 등으로 비용과 경제적 편익 측정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별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하여 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심사위원회 대상 타당성 검토 결과 등 설명 지속 추진 	연도	B/C 심사건수*	B/C 1 이상 사업			B/C 1 미만 사업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계	90	16	15	93.8	74	56	75.7	2023	32	7	7	100	25	17	68	2022	19	4	4	100	15	12	80	2021	39	5	4	80	34	27	78.4
연도	B/C 심사건수*			B/C 1 이상 사업			B/C 1 미만 사업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심사건수	통과건수	통과율																																								
계	90	16	15	93.8	74	56	75.7																																								
2023	32	7	7	100	25	17	68																																								
2022	19	4	4	100	15	12	80																																								
2021	39	5	4	80	34	27	78.4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 소송 관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의 문제와 관련부서의 대응과 패소원인으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후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월 디지털재단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패소 원인은 행정절차법 미준수*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시 임명절차 미시행**임 * 해임처분 통보 시 처분의 구체적 사유, 후속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보 ** 해임처분 의결 당시 참석위원 7명 중 내부위원 재정기획관에 대한 시장의 임명절차가 없어 의사정족수 미충족 ○ 이에 따라 '22.7월부터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인사발령 시 임명방침을 수립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 재정기획관 - '23.7월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또한,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등 처분 관련 가이드를 주관부서에 배포하였음 : '23.1월
<p>26.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에 참석률이 낮음. 실장의 참석률을 높여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당연직 위원인 소관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음 ○ 이외에도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하여 내부 공무원 위원의 직급을 현실화하거나, 대리참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별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도록 실·국에 권고('23.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조례 개정중) 등 위원회가 당연직 직급 조정(실·국장→부서장)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효율화 제고 위해 '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23.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대상 : 총 65개 (254개 중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유형 : 비상설 27, 폐지 8, 통합 30(38→8) ▶ 정비방법 : 조례개정 55, 법령개정 건의 10 ○ 정비실적('23.9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 22개 정비완료(비상설 14, 폐지 6, 통합 2) ▶ 법령개정 : 10개 법령 개정 건의 완료('23.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비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p>28.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무발명 보호·육성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 금전보상 외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변리사 제도 운영) 발명자의 특허관련 상담 및 권리취득·분쟁 해결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기 특허권 보유발명과의 차별화 구현 방법, 효율적인 실현방법 등 전문가 컨설팅 진행 - (발명지원 선지급) 제안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자재구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사전 지원 ○ 다만, 인사 가산점 부여 인센티브는 공무원 직무발명 참여자 대부분 기술직군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소지가 있어 다양한 직원 등 의견수렴 등의 검토 필요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1. 현재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함. 추가적으로 자녀 많이 갖기 등 캠페인·홍보 필요함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변화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급격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도입 및 이민정책 등에 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안 논의('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市 협업 외국인 가사인력 시범도입 추진 - 서울형 이민정책 수립 검토를 위한 현안 논의('23.9.)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전략과제 자문·심의 지속 추진 : '23.11.~
<p>2.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다자녀 출산 직원에 대한 승진 가점 등 강력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공부문의 선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 ○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도입 예정이며('23.10.16.입법예고), ○ 향후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시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시도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 도입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상위법령상 근거 마련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검토

건의사항	조치결과
<p>3. 마을변호사·법무사 사업이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추진되어, 예산 집행률이 낮음. 집행률을 높여 주기 바람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대면상담 활성화 및 마을법무사 시행 동주민센터 확대('23.6월~)에 따라 집행규모가 높아짐 ※ '22년 연말 집행률 <u>64.8%</u> → '23.10.16.기준 집행률 <u>78.3%</u> ○ 하반기 집행액 증가 추세에 따라 '23년 말까지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p>4. 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마을법무사 관련하여 성명 등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제출된 요구자료에는 비공개가 되어 있음. 공개가 필요함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 요구자료에 마을법무사 성명 등 공개하여 제출 완료('23.10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5.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 서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임. 홍보 및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바람.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및 모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홈페이지 및 SNS, 서울페이+앱, 시 보유 영상·문자 매체 홍보문구 표출('23.1.~) - 전동차 내부 광고(4호선 모서리 광고 470면, 9호선 액자 광고 84면, 2호선 454면 / '23.2~) 및 광역버스 외부광고* 활용 * 총 10대, 분당·일산·동탄 ↔ 광화문·잠실·강남 노선으로 다양하게 편성 - 서울시 홍보대사(슈카)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제도 소개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 개최(5.14.~) - 제1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 및 서울특별시 홍보관 운영(9.2.~9.4.) ○ 기금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부서 수요조사 및 예산 부서 검토 등을 거쳐 4개 후보군* 1차 발굴(2.8.~2.2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고향사랑기금사업 후보군</p> <p>①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③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지원 ② 청소년 부모 자립지원사업 ④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지원사업</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3.20.)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 수립(5.22.) ※ 23년 기부금은 전액 예치 후 기금사업 개발 집중 예정 -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사업 지속 발굴을 위한 부서 수요조사 2차 실시중(9.26.~)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례품 선정위원회(4차례)를 통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22.12.23. / '23.1.17. / 5.4. / 8.29.)

건의사항	조치결과
	<p>1차 답례품목 선정 :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지역상품권, 농산물</p> <p>2차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권) 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한강유람선(3종/4개업체) · (서울상징공예품) 경북공자경전꽃담스카프, 전통물감 채색상자 ‘창덕궁 에디션’(2종/2개 업체) · (농산물) 경북공쌀, 황실배(2종/2개 업체) <p>3차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권)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관람권, 롯데월드 어드벤처 자유이용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입장권,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입장권(4종/2개 업체) · (서울상징공예품) 자개 메모지, 도자기 메모지, 자개 볼펜, 한강 분리수거 멀티툴, 청자 마그넷, 한글참 시리즈(6종/3개 업체) · (농산물) 반려식물(1종/2개 업체) <p>-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및 답례품 공급(5.10.~)</p> <p>4차 답례품목 추가 선정 : 숙박권·체험권, 서울 제조품, 식료품</p> <p>□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모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외국인(등록 재외국민 포함) 기부 가능 제도 개선사항 등 홍보 ○ 기금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기금사업 개발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활용 희망 사업 부서 수요조사 지속실시 ○ 답례품 추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답례품 품목 확대 및 추가 선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6. 투자출연기관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고객만족도는 높게 나오는데도 내부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조직문화의 경직된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되므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내부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市 제출 및 이행('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결과 기반 '23년 기관별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23.2월 ○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직원 간담회 개최('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월) 만족도 점수가 저조한 5개 기관 선정하여 진행 - ('23.9월)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포함하여 5개 기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출연기관 인사관리 실무담당자 및 내부직원 ▶ 내용 : 만족도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직원의견 공유 및 조직문화 발전방안 도출 ○ 기관장 평가지표 내 내부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10% → ('22년)12% → ('24년)20%(예정) <p><input type="checkbox"/> 추진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내부만족도 점수 전년 대비 2.6점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64.5점 → ('23년)67.1점

건의사항	조치결과
<p>7. 서울시 본청의 부채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감축을 위한 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함 (재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관리 필요 지표는 부채가 아닌 채무로서, 채무규모 증가세 억제를 위해 중점 노력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 이행에 미래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채무·임대보증금·선수금 등) • 채무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 (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서울시 재정진단·중장기 재정전망·재정건전성 개선방안 및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 후 중장기 채무·부채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명 :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 주요내용 : 서울시 재정진단, 중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 전망에 따른 채무·부채 관리·개선방안 마련 등 - 연구기간 : '23.1월~10월 (10개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 '23.1월~10월 ○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수립 : '23.11월~12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8. 서울시 지속가능한 2030 의제가 부진하지 않고, 향후 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함 (평가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4개 분과, 29명 위촉) 및 토론회 개최('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토론 및 향후 지속가능발전 업무 운영 방향 논의 ○ 중장기 행정계획 4건 검토('23.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도시안전관리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 토론회 개최('23.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4월), 사회(6월), 경제(9월) ○ '22년도 성과지표 실적 현행화 및 지표 달성현황 관리('23.6.)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12월) 분과 토론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3.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 점검 및 '24년도 운영방안 등 회의 ○ 중장기 행정계획 3건 검토 : '23.11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주거종합계획('23.1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23.12.)

건의사항	조치결과
<p>9. 서울기술연구원 최초 설립계획서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기관 통폐합이 조직 비대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복합연구의 시너지 효과창출 및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함 ※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사항('22.12.23)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즉시 통합 추진 ○ 장기결원 및 유사·중복분야 등에 대한 정원 감축을 통해 당초 342명(서울연 234명, 기술연 108명) → 301명(통합연구원)으로 총 41명을 감축함 ※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기술연구원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은 보장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연구원 출범 : '23.11월(예정)
<p>10. 과거 유사·중복 위원회가 지적이 되어 통폐합 추진중에 있음. 기획조정실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효율화 제고 위해 '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23.3.31.) - 정비대상 : 총 65개 (254개 중 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유형 : 비상설 27, 폐지 8, 통합 30(38→8) ▶ 정비방법 : 조례개정 55, 법령개정 건의 10 ○ 정비실적('23.9월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개정 : 22개 정비완료(비상설 14, 폐지 6, 통합 2) ▶ 법령개정 : 10개 법령 개정 건의 완료('23.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정비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건의사항	조치결과
<p>11.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해서 인사 가산점 부여 등 개선대책이 필요해 보임 (창의행정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무발명 보호·육성 및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 금전보상 외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음 - (고문변리사 제도 운영) 발명자의 특허관련 상담 및 권리취득·분쟁 해결 지원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기 특허권 보유발명과의 차별화 구현 방법, 효율적인 실현방법 등 전문가 컨설팅 진행 - (발명지원 선지급) 제안사항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자재구입, 자료수집 등에 필요한 비용 사전 지원 ○ 다만, 인사 가산점 부여 인센티브는 공무원 직무발명 참여자 대부분 기술직군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타직렬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소지가 있어 다양한 직원 등 의견수렴 등의 검토 필요
<p>12. 서울로 7017 슈즈트리 등 전임시장 당시 실효성 없는 일회성 전시행정추진 지적.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은 지양하기 바람 (공원여가정책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 7017 개장 시('17.5월) 재활용 신발 3만여 켤레를 활용한 슈즈트리 설치로 인해 흥물과 예술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22.1.1.부터 재정·인력의 효율적 감축과 시민수요에 집중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관리체제로 전환·운영 ○ '달려라 피아노' 등 시민 자율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로 7017 방문 시민이 원하는 쾌적한 보행·휴식공간으로 관리운영 집중 : 연중 상시 ○ 시민 자율 참여 위주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연중 상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p>13. 투자출연기관 사내대출 관련 기관별 금리 및 상품이 제각각인데, 서울시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방안을 건의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22.9월)」에 따른 투자출연기관 복리후생제도 점검 시행 : '22.10월~11월 ○ 복리후생제도 개선 추진실적 점검 : '23.6월, 9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개선 이행 여부 점검 및 시정명령 : '23.11월~
<p>14. 50플러스 재단이 3년 연속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받으며 최우선 평가개선과제가 기관장과 임원으로 지적되는데, 개선이 안되고, 고위급 임직원에 특정 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함 (평생교육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플러스재단 경영효율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개편 완료(2022.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상·하조직 슬림화(3본부 20팀 → 2본부 12팀) - (사업) 중장년 일자리 중심의 사업추진 및 상담·교육 후속 일자리 연계 강화 ※ 생애전환지원본부+일자리사업본부 ⇒ 사업운영본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22.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승진제도 개선, 임직원간 신뢰 관계 확립, 업무시스템 개선 등 3개 분야 개선 과제 도출 ○ 50플러스재단 내부고객만족도 및 조직문화 개선 지속 추진 및 성과 모니터링

건의사항	조치결과
<p>15.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에서 이용자들에게 통폐합 논의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단체문자를 발송했다는 정황이 있으나, 기관에서는 발송한 적 없다고 답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바람 (평생교육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문자 발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93건(168건,125건 / '22. 7.8.발송) - 발송비용 환수: 금7,590원 처리 완료 ○ 향후, 요구자료 제출 시 오류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제출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송 승소 중 미회수된 내역 (법률지원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 완료
2. 최근 3년간 서울기술연구원 수탁사업 현황 (창의행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3. 투자출연기관 성과급 급수별 소요예산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6. 제출 완료
4. 최근 5년간 위원회 현황 및 개최결과(제척/기피/회 피 사유 포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5.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진수(개최일시 포함)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7. 제출 완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6. 2020년, 2021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수당 지급, 총액 700만 원 이상 건수, 세부지급내역 및 검토보고서 일체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18. 제출 완료
<p>7. 2019~2021년 모든 위원회(본회의, 분과회의, 서면회의 등) 출석률 제적 50% 미만으로 개최된 회의 상세내역(회의시간, 내용, 수당 지급 내역, 참석 인원 등)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8. 제출 완료
<p>8. 최근 3년간 공공기여 내역 (공공자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14. 제출 완료
<p>9. 투출기관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제고 관련 상세자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1.14. 제출 완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10. 2022년도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기획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11. 서울시 보증채무, 직접채무 관련 자료 (재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완료
12.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 학술용역변경 지침, 과업변경 지시 관련 자료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1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평가, 위원선정경과 및 추진보고서 (재정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4. 제출완료
14. 2019년~2022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임명절차 및 위촉장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15. 운영심의위원회 당연직 임명절차 관련 임명·위촉의 근거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14. 제출 완료</p>
<p>16. 서울시 소관 민간위탁, 대행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대행 사무 관련 시설현황, 소유주체 구분 -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작물, 기계 및 기구현황과 공유재산 대장 등록여부 - 위와 관련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공제가입 현황(가입주체, 가입금액, 보험료 현황)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 '22.11.29. 제출 완료</p>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기 획 조 정 실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

기획조정실

총 2건 건의

목 록

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
1	자치입법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무담당관
2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별도 제출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재정담당관

법령 · 제도개선 건의사항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1. 자치입법권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무담당관, '23. 10.)</p>	<p><input type="checkbox"/>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28조제1항 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u>법령의 범위에서</u>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조례 제정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u>법령의 범위에서</u>”를 “<u>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로 법 개정 필요 - 대법원 관례 등에서도 “법령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으로 ... 조례가 국가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추29)</p> </div>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개정 : 법령의 범위에서 →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28조 	<p>(행정안전부)</p>

건의 제목 (건의부서, 건의일자)	건의내용	소관부처										
<p>2.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별도 제출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재정담당관, '23. 10.)</p>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시의회에 제출 ※ 시민의견서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작성 ○ 시민의견서와 최종예산안 동시 제출로, 의견서 작성 시 조정 중인 예산안까지만 검토됨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견서 완성도 저하 및 실효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 검토됨에 따라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한계 - 최종예산안과 의견서 간 내용이 상이하어 의회 심의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의견서 활용 제한 <p><input type="checkbox"/> 건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예산안까지 반영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의견서를 예산안과 별도 제출 가능토록 법 개정 <div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법 개정안〉</div> <table border="1" data-bbox="571 1368 1219 1697"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th> <th style="text-align: center;">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th> <th style="text-align: center;">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생략)</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생략)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행정안전부)</p>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생략)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